

한국정치, 국가경영, 그리고 한국정치학*

정 은 제 |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동안의 한국정치학은 구미의 정치적 경험과 그것에 바탕을 둔 이론들에 의한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적 연구에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간 한국정치학은 한국의 정치현실과 전통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서의 '현실감각'의 빈곤으로 인하여, 한국정치과정에 대한 꼼꼼한 관찰과 그것에 바탕을 둔 한국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이나 모델의 생산에 소홀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화주의적 성찰의 빈곤으로 권력갈등을 넘어서는 건강한 국가경영에 필요한 지혜와 담론의 생산에 기여한 바가 미미했다. 이러한 한국정치학의 약점을 보완하고, 정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포함한 우리의 정치경험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관심과 리더십 및 국가경영과 관련된 정치학적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자음과 같은 연구프로젝트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정치적 생활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함”(김홍우 1999, 717)으로서의 꼼꼼한 관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학적 모델과 이론의 개발에 보다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구미의 이론과 개념들로 ‘소외되거나 왜곡된’ 한국정치현실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사관과 문화중심적 연구에 의해 ‘죽어있는’ 조선시대 및 그 이전의 정치사 연구에로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한국정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정치사상은 한국적 전통과 경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분석을 통하여 이해되고 정리될 때에 비로소 한국인과 한국정치를 이끄는 사상과 철학이 될 수 있다”(이홍구 1996, 468)라는 역사의식에 따른 실천적 지혜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05년 5월 27일에 개최되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대회〈세종의 국가경영과 한국학의 미래〉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가필한 것임.

둘째,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전통'(傳統) 중심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되었던 구한말기나 해방전후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구미 선진국들의 사상과 문화의 '수용'(受容)이 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전통 혹은 역사적 지속의 측면에서 주요 전환기의 정치사회적 운동들과 사상적 흐름들을 재발견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의 근대화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상적인 근대화 혹은 발전이란 전통과 역사로부터의 단절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그것의 지속과 성숙과정에서의 적응능력의 증대이기 때문이다(정운재 2005a, 175-202).

셋째, 우리의 정치적 생활세계에 던져진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참하여, 국가경영 차원의 비전, 진단, 그리고 처방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이러한 비전, 진단, 처방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및 상상력의 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면 그것은 곧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 여타 발전도상국가들에게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포함한 한국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여러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주요 사건과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과 사상들을 이 같은 "문제해결적 접근"(정운재 1999)을 통해 새롭게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금동서의 역사를 통해 등장했던 각종 사상(思想)과 사실(史實)들을 관념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행에서 나아가 국가경영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과 사실들은 사실상 그 주장한 인물과 관련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상사회를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결과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대 서구의 사회과학이 실증주의적 과학원칙에 경도되어 사실과 가치를 분리했던 연구경향이 지닌 파행성을 극복하고, 사실과 가치가 서로 교섭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격물(格物)하고 치지(致知)하는, 그럼으로써 경(經)과 사(史)가 다함께 섭렵되고 고려되는 한국정치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정치학, 국가경영, 리더십, 국가성, 자아준거적 학문, 현실감각, 공화주의

I. 머리말: 문제의 제기

건국이후 한국민주주의는 반공건국, 경제적 근대화, 정치적 민주화의 수순을 밟으며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물러나 쉬고 있는 어느 원로 정치인이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하여 학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식화된' 평가를 인용하거나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정치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국현대정치사에 있어서 발견되는 이러한 '발전패턴'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동안 유행했던 '박사가 집지어 놓고 장군이 술단지애 밥을 잔뜩 해놓았더니, 데모대장이 다 먹어버리고 술단지까지 다 팔아치웠다'는 정치풍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치학은 이 같은 한국 현대정치의 경험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과 그에 필요한 이론적 모델 생산에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현대정치에 대한 정치인들의 평가와 시정의 풍자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맥락에서든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든 반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나 한국이 여러 차례의 위기와 돌발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연구¹⁾가 아직 제대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이웃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조선왕조가 정치적으로 마감된 이후 집권 세력이 계속 바뀌는 정치적 불연속 상태에서 전개되면서도 나름대로 건국-경제근대화-정치민주화의 도정을 겪어온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학술적 연구 성과가 아직 없는 것이다. 그간 생산된 한국정치학의 업적들은 대부분 수입이론들에 의거한 평가적 연구들이지, 우리의 생생한 정치적 경험들과 전개과정들에 대한 꼼꼼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정치의 이해와 설명은 빈곤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자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한국정치학 교과서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각자 나름대로 배운 구미의 이론적 전망에 입각한 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처방은 있을지언정, 한국정치의 실상(實狀)을 바탕으로 생산된 모델이나 정치발전 이론은 아직 없는 것이다. 그리고

1) 언젠가 원로정치인인 박준규 전국회의장은 학자들이 청중의 대부분이었던 어느 모임에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적어도 그러한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현대정치사의 생생한 배경으로서의 전통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 경험들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현대정치사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특징들이 충분히 포착되었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맥락에서의 학문적 노력과 성찰은 아직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 근자에 이르러 전공이 무엇이든, 한국정치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전혀 새롭게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기 시작했고(배성동 2002), 국가경영 혹은 나라살림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와 탐구가 아직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정치를 ‘권력허기증’에 걸린 환자같은 비정상인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간주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정치혐오증 혹은 냉소주의는 여전하고, 정치를 사회를 위한 여러 가치들의 권위적인 분배로 이해하여, 분배할 가치로서의 각종 재화와 자원들의 생산과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현실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 시대부터 학자와 언론인들 사이에 리더십, 국정관리능력, 혹은 정치력 등과 같은 말들이 자주 회자되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에 의한 ‘건국의 정치’와 ‘근대화의 정치’가 마감된 이후, 정치적 파란과 우여곡절 끝에 이른 바 ‘체육관선거’ 대신 다시 국민직선으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민주화투쟁을 통해 경력을 쌓았던 정치엘리트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국정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한 이후, 각종 시행착오, 부정견함,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 그리고 어설프며 미숙한 국정처리 사례들이 자주 드러나면서, 우리의 언론(言論)에는 리더십이나 국가경영, 혹은 국정관리능력과 같은 말들이 자주 등장했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온건파나 민주화세력과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집단들에 의한 비판적 문제제기 혹은 정치적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치와 교육에서 리더십과 같은 개념과 관련된 이론들과 정치에 있어서 사람 요인들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정치학의 필요성을 강조한 진지하고도 심각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²⁾ 그리고 반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을 잡거나 운용하는 과정이 비합법적이고 독재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획득된 권력을 국리민

2) 예컨대, 정윤재 1997, 25-55.

복에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과 서투름도 큰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물론 일부 정치학자들 사이에는 리더십, 국가경영, 정치운영, 나라살림, 국정관리, 정치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논문과 시평을 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 연구기관들이 속속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정치가들에 대한 리더십 분석이나 전기, 그리고 회고록의 학문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김학준 1987; 정운재 1997; 신복룡 1999). 그동안 정치발전과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구조적 기능의 활성화나 제도적 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민주주의의 건강하고도 공고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사람' 요소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적 검토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지도자들의 국가경영능력이 강조되는 한편, 공직자들도 지구화되고 유목민화되는 시대적 추세에 적극 대처하여 보다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 그러한 사례들을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통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연구와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문화재청 2004).

그래서 필자는 이제까지의 한국정치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적 문제제기와 리더십 혹은 국가경영능력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논의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의 한국정치학이 새롭게 관심 가져야 할 연구주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제까지의 한국정치 혹은 한국정치학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 국가경영과 관련된 정치학적 논의들 중에서 터커(Robert C. Tucker) 교수 등 리더십 전문 학자들의 '리더십 접근'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한 다음, 최근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가 20세기 정치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제시한 국가성(stateness) 및 국가건설(state building)에 대한 견해를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II. 한국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³⁾

1. 현실감각(the sense of reality)의 빈곤

현대 한국정치사가 반세기 이상 펼쳐지는 동안 우리의 정치와 정치학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이유와 배경에서, “현실감각” (the sense of reality)⁴⁾이 충분하지 못한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생활세계로서의 한국과 한국정치에 대해 먼저 “다가서서 찬찬히 관찰하고 살피는” 진지한 과학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건강하고 보편성 있는 지식의 생산과 추구는 항상 자기가 사는 현실, 즉, 언제나 복잡다단한 문제들로 가득 찬 우리의 생활세계에 대한 세심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관찰에 바탕을 두는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정치학』을 통해 추상적인 지식보다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얻어진 사실을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大學』을 통해 대인지도(大人之道)의 기본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설파했던 증자(曾子)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대부분 구미선진국이나 일본의 현실과 사정에 먼

3) 이러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필자가 한국정치평론학회 2005년 춘계심포지움에서 1차 시 도하였음(정윤재 2005b, 3-11).

4) 이 용어는 Isaiah Berlin이 이른 바 영향력있는 근대 정치, 사회이론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음을 비판하며 사용한 것으로, 예컨대, Berlin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있어서 개인들의 삶은 일련의 법칙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기에 “미약한 존재”이지만, 실제로 개인들은 몇 가지의 자연법칙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고, 실수가 많으며, 패배하며, 서로 피해를 주는 존재이며, 또 그런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동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지력”(will-power)과 “특정상황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비일반화적인 인식 및 평가능력”(a capacity for non-scientific and non-generalising assessment of specific situation)을 지닌 성공적인 사람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Berlin은 정치·사회적 이론들이 “바보같고 교조적이며,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고, 무슨 고통을 당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What do men do and suffer, and why and how?”)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Isaiah Berlin 1996, 38-39 참조.

저 다가가는 격물(格物)에 충실했고, 그 결과 한국정치학은 그것에서 얻어진 학문적 결과물들을 획득하고 이해해서 국내에 소개하거나 그것이 제공하는 방법들을 통해 한국정치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이른바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연구물들을 양산했다. 정치학자들은 그래서 논문과 시론, 시평을 통해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을 준거대상으로 예로 들면서, 그와 비교하여 한국정치를 신랄하게 그리고 때로는 '경멸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역사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정작, 현대한국의 구체적인 경험과 사실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토코빌이 말했던 것처럼, "마치 신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듯, 미국 정치세계는 인민이 지배하고" (The people reign in the American political world as the Deity does in the Universe) 있었지만(Tocqueville 1984, 11),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한국의 정치는 정치지도자 혹은 국가가 지배했던 영역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학과 정치평론은, 그러한 한국정치의 특징을 잘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처방을 구하는 분석방법을 탐구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인민이 지배하는" 미국정치를 과학적으로 보기위해 만들어진 체계접근법이나 집단 접근법 등에 입각하여 한국정치를 평가하고 비판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투입중심의 미국정치를 그대로 본따 핵심적 정치과정인 "전화"(conversion)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두지 않았고 산출과정은 행정학의 대상으로 내주며 정치에 대한 '행태주의적 관찰'에 열심이었다(정운재 2003). 그 결과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초사실화"(hyperfactulization)를 벗어나지 못한 채(안청시 1987), 지적자원이 달리면 미국의 정치학 서적들이나 미국정치학회보를 들춰였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형편을 둘러보고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정치 "의" 철학을 탐구하기보다 한국정치 "에 대한" 철학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였다(김홍우 2003, 713-718)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전통이 있는 민족국가다. 일찍이, 이흥구교수는 정치발전은 '사회보존'(social conservation)의 대전제에서 고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과 역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이흥구 1996, 108-109). 또 미국의 정치학자 쓰루타니 교수도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전통적 가치들을 현대적으로 흡

써있게 활용할 때 근대화는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Tsurutani 1973). 후쿠야마 교수 역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전통적 관습에 바탕한 호혜성,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 상호신뢰와 같은 요소들이 가미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Fukuyama 1996).

그런데 한국정치학의 큰 흐름은 이러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컸다. 그래서 예컨대, 조선시대를 포함한 과거사와 진귀한 연구자료인 조선왕조실록이나 독립신문과 같은 문헌들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서구지역 민족국가들의 근대화는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전통 및 전통적 가치와 문화의 성숙과 적응능력의 확대과정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우리의 근대화는 되려 전통과 근대를 차갑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따라 전통과 단절되는 가운데 추진되었고 정치학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에 기여했다. 그리고 한국정치학은 과거와 전통은 방치한 가운데, 현대의 바깥에서 그리고 바깥의 역사와 고전 속에서 새것을 찾아헤매는, 따라서 좃대있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뿌리가 잘리거나 뿌리가 깊이못한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주로 수입된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허용되는 한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평가적 연구는 많았으나, 한국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된 경험적 연구 및 그것에 바탕을 두는 모델과 이론의 생산은 드물었다.

최근 조선일보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은 역사 짧은 미국사람들이 복잡다단한 국제관계를 비즈니스하듯 이해득실로만 따져 단숨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들어 마치 '신도시주민'들 같다고 하면서, 우리처럼 역사가 길고 사연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구도시주민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꼬불꼬불한 골목길과 같은 '과거의 부담'을 떠맡고 문제해결의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쓴 적이 있는데(조선일보 05/4/18, A14), 이러한 일선기자의 냉정한 관찰은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소홀히 취급했던 오늘날 한국의 정치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정치학이 살아있는 현재는 물론 또한 분명히 생생하게 존재하는 과거와 역사와 전통을 경시하는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격물치지를 시도한다면, 한국정치학은 새롭게 날 수 있을 것이다.

2. 공화주의적 성찰(republican reflection)의 빈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며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억압하는데 익숙했을 뿐, 공화(共和)의 가치에 입각한 공동체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⁵⁾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화의 가치를 존중하여 말과 일을 통하여, 아니 우선은 말을 통하여서라도 국가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물, 즉, 공공체(res publica)인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의 존재를 서로서로 먼저 인정하고 확인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정치과정에서도 여와 야, 진보와 보수는 서로가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부분 혹은 상호보완적 존재들로 인식하지 못했다. 어찌보면, 권력과 이권싸움의 정글 속에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출범 때부터 집권엘리트들이 이러한 건강치 못한 태도로 국정에 임했고 이후의 정치과정에서도 그러한 정치적 주류들의 태도와 정략은 수정되거나 포기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또한 냉혹한 권력게임과 섞였던 이데올로기적 냉전정치와 강력한 행정국가적 권위주의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지속되었고, 그것에 저항하는 강력한 반독재운동의 정치 역시 자유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5) 공화 혹은 공화주의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초보적이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를 바탕으로 공화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의 키케로와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 그리고 프랑스의 장 보댕과 몽테스키외에서 보듯, 국가경영에 있어서 공화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의 역사보다 오래고 길다. 둘째, 국가경영에 있어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게는 애국심, 본사, 헌신, 보살핌, 준법, 절제, 등과 같은 ‘덕상들’(civic virtues)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각종 공공행위들은 모든 국가구성원들이 다같이 이같은 덕성들을 갖춘 것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셋째, 국가경영에 있어서 국가(정부)의 역할과 일반 국민들의 공직에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이탈리아 출신이면서 지금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정치학교수로 있는 Maurizio Viroli 박사는 시민정신의 쇠퇴와 돈, 매스미디어 혹은 카리스마에 의한 권력집중현상을 예로 들면서 미국과 유럽의 민주정치가 공화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Viroli 1999 참조. 이 책은 최근 곽경희·김동규에 의해 『공화주의』(인간사랑, 2006)로 번역되었음.

우리의 정치토론과 정치과정은 정상적인 균형감각(the sense of balance)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들은 모두 언제나 민주주의로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옹호했지, 공화주의의 메시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아마도 공화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⁶⁾

그 결과, 정치인들끼리의 인간관계나 정치적 토론에서 상대방의 견해나 행동거지에 대해 균형 잡힌 시비절기보다는 한쪽으로 닦아세우거나 그 반대의 극단에서 적당히 보아 넘겨주는 방식의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 정치는 이익과 권력의 양극단에서 서로 이진투구하거나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치담론은 사실상 극단적인 이익싸움, 감정싸움, 파벌싸움, 집단 패거리싸움의 연장이었을 뿐, 그것을 해소하거나 약화시키는 균형자적 기능은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찬찬한 토론과 대화에 의한 우정 쌓기보다는 당장에 걱정적으로 편부터 갈라 우애와 동지애를 표출하는 예가 더 많았고, 그렇다보니 서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공공연하고 차가운 시비절기로서의 정치토론과 정치경쟁은 쇠퇴하고 사라졌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에서는 공화의 가치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바람에, 아니, 공화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으로 제압하는데 능숙한 정치인들이 득세하였다. 이런 관행의 연장으로서 한쪽눈감기식 담론이 유행했을 뿐, 양쪽 눈을 다 뜨고 온몸을 다 바라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며 차근차근히 논리정연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거나 싸움할 줄 모르는 순진한 바보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권위주의 정치였고 권위주의 정치문화였고 잘못된 군사문화였다. 평가르기의 감정과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시대의 담론은 그 자체가 그 같은 행위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즉, 양극단의 생각들이 실천 차원에서 수렴하도록 도와주면서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던 여러 주장들은 현실을 모르는 혹은 나이브한 혹은 기회주의적인 담론으로 꺾박받았던 것이다.

요컨대, 그간 우리의 정치와 정치담론은 냉전정치, 권위주의독재정치를 겪으면서, 그리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과정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면서”(강정

6) 우리나라 헌법해설서인 『대한민국헌법을 읽자』(정종섭 2002, 17)에 보면 헌법 제1조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지 않다.

인 2004),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공동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차원의 성찰이 빈곤했던 관계로 균형감각 있는 문제해결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데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했었다. 최근 최상용 교수는 중용(中庸)에 대한 동 서양의 정치사상을 정리하면서, “정치적 사고는 이분법이 아니라 양극의 중간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착안하는 배합적(configurative) 사고”이며 “중용이야말로 정치적 사고의 정수”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최상용 2002, 43), 이 역시 한국정치와 정치담론의 불균형을 허물거나 최소화하는 건강한 국가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III. 정치리더십과 국가성(stateness)의 중요성

1. 리더십 접근(leadership approach)의 필요성⁷⁾

현대정치학과 한국정치학에서 리더십 혹은 지도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⁸⁾ 리더십은 정치,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생생한 현상 중 하나”(Merriam 1966, 107)고, “지상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면서도 가장 덜 이해되고 있는 현상”(Burns 1978, 2)으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아직도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도 몇몇 정치학자들은 정치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대화 및 민주적 정치발전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자질, 능력, 그리고 역할과 발전양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 했는 바(정운재 2003),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국가경영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터커(Robert C. Tucker)는 정치가 권력추구적 속성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

7) 리더십 연구의 빈곤과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줄지,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나남출판, 2003)를 참조바라며, 여기서는 정치리더십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다.

8) 그 원인을 Glenn D. Paige 교수는 현대정치학의 주류를 형성했던 미국정치학이 유럽의 진화론적, 맑스주의적, 심리학적 결정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Paige 1977, 39).

지만, 그동안 정치연구가 지나치게 권력갈등과 권력획득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권력중심적 분석”(power-oriented analysis)에 치우쳤기 때문에 권력을 지닌 정치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떠한 일을 하도록 기대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지식을 생산해내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권력접근의 이론적 맥락이 역사적으로는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앤터니 다운스, 밀즈, 라스웰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정치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권력의 추구와 행사와 의사나 양치는 목동과 같이 무리를 돌보는 예술이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도, 그동안은 전자의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터커는 정치의 공동체에 대한 봉사적 기능과 국민들에 대한 방향제시 기능을 강조했던 플라톤을 정치에 대한 리더십 접근의 효시에 해당하는 정치사상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행동(political action)으로서의 정치리더십은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diagnosis),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prescription), 그리고 진단과 처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동원”(mobilization), 등 3가지 기능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터커는 이제 정치학은 권력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었던 정치, 사회 운동과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분석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 정치운동은 이른 바 “제도권 리더십”(constituted leadership)에 대비되는 “재야 리더십”(unconstituted leadership)의 출현배경이 되고 동시에 그들에 의해 주도되는데, 그것은 첫째, 제도권 리더십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스럽게 대변해주지 못할 때, 둘째, 변화를 향한 제도권의 리더십이 충분치 못할 때에 발휘된다고 주장했다(Tucker, 1981).

쓰루타니(Taketsugu Tsurutani) 교수는 일본의 근대화 경험과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근대국가의 발전에 대한 정치리더십 접근을 최초로 시도했던 일본계 미국정치학자다. 그는 먼저 현대의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 특정국가들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가운데 정치발전 혹은 근대화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확인하고 열거하는 데에 매달려 발전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리더십의 숨씨와 역할은 그들에게 있어 주변적 관심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6세기 이탈리아와 현대의 발전도상국가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없는 가운데 분열되어있고, 정치권력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며,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조화스러운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경영 방향이 부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

적하면서, 이렇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발전도상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지도자는 단순한 대리인이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종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최종 결재권자”(arbiter)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소임은 국가안정의 중심인 정치적 권위체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질서와 안정을 제도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치지도자는 언제나 숭선수법의 역할을 다 해야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전통문화와 일치하는 정치체계의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 정치사회에 불법적인 폭력(illegal violence)이 존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정치사회가 부패하다는 것과 발전과정을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는 폭력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surutani 1973).

웰시(William A. Welsh)는 정치, 사회적 권력불평등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정치권력은 언제 어디서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정치분석에서 보다 중요한 쟁점은 불평등한 위계구조 그 자체라기보다 “위계상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부구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반응적인지(responsive)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반응적이라면 어떻게 반응적이고,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웰시는 또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이론상의 주요문제는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존재한다거나 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결집능력이 있고 대국민 침투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중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과 어떠한 연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대의 사회과학자들이 엘리트와 리더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엘리트”(elite) 혹은 “엘리트적인 것”(eliteness)은 “위계적 지위”(hierachical position)를 기본으로 하는 “지위중심적 개념”(positional concept)이지만, “리더십”(leadership)은 “특정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자원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핵심이 되는 “관계중심적 개념”(relational concept)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 개념에 충실한 연구를 위해서는 엘리트와 엘리트 사이, 엘리트와 비엘리트 사이, 그리고 엘리트와 잠재적 혹은 비활동적인 엘리트와의 “상호작용 패턴”(patterns of interaction)에 분석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Welsh 1978).

2. 국가건설(state building)의 중요성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최근 낸 『강한 국가의 조건』⁹⁾이란 저서에서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란 새로운 정치학적 탐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국가란 제도가 약 1만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로 생겨났으며, 중국에서는 고도의 관료체제를 갖춘 국가가 수천 년 전부터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한 다음, 군대를 보유하고 과세권을 확립하며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 넓은 영토에 걸쳐 주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근대국가(modern state)가 출현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한 근대정치학(modern political science)의 과제는 언제나 국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의 활동을 국민들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러한 권력 행사를 법의 통제(the rule of law) 아래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소멸로 강화, 확산된 민주화의 바람, 즉, ‘제3의 물결’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겪는 가운데, 어떤 국가들은 짜임새 있는 국가경영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성취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속되는 국정혼란과 비효율적인 자원활용으로 여전히 국가건설에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나라들은 고질적인 빈곤과 실업, 그리고 환경오염의 굴레에서 제대로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지만 언제라도 독재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에 노출되어있다. 그래서 후쿠야마 교수는 “국가성”(stateness)의 중요성을 논하고 역사적인 제도로서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면서, 국가경영과 국가경영 능력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였다.

후쿠야마 교수는 먼저 “국가성”(stateness)은 ‘국가활동의 범위’와 ‘국가의 능력’으로 구성되는 바, 전자는 “정부가 떠맡는 다양한 기능과 목표”이며, 후자는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고 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능력”을 말한다(Fukuyama 2005, 22). 그리고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은 국가활동의 범위를 면밀하게 한정하는 ‘작은’ 정부체제를 가진 나라이면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법과 정책

9) 원제목은 *State Building*이며, 2005년에 안진환의 번역으로 도서출판 황금가지에서 펴냄.

을 만들고 집행하는 능력 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률원칙의 확립'과 같은 국가능력이 자유주의 원리에 따른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국가범위의 축소보다 "더 근본적"(more fundamental)이라고 실토했던 자유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Fukuyama 2005, 35)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후진국가들이 필요한 것은 "광범위하게 기능하는 국가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국가 능력 범위 내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가"(Fukuyama 2005, 168)라고 주장했다. 즉, 자유화나 민영화, 혹은 개방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가 공공부문의 영향력 약화와 약탈적인 재벌 및 권력자 주변 인사들의 기회 및 자원 독점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후쿠야마 교수는 "지난 삼 십여 년 동안 세계 정치학의 경향은 국가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흘렀다"(Fukuyama 2005, 167)고 지적한 다음, 9.11 이후 전 세계 정치학의 주된 현안은 국가성 축소에 관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성 회복 또는 건설에 관한 방법(Fukuyama 2005, 168)에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작은 정부가 힘없는 정부를 뜻하는 건 아니다"(Fukuyama 2005, 20)라면서 강한 국가의 네 가지 요소인, 조직설계 및 관리, 정치체계 설계, 합법성의 토대, 문화적,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Fukuyama 2005, 40-59), 국가경영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국가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즉, "자아준거적으로"¹⁰⁾ 선택할 것을 주문하였다. 첫째, "강한 국가에 맞는 국가조직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동안 행정학자들은 공공 행정 조직에 대한 지식을 미시경제학과 유사한 이론 체계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합된 조직 이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경영에 긴요한 행정조직의 내용과 운용방법은 나라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함을 이르는 것이다.

둘째, "강한 국가에는 그에 걸맞는 정치 체제가 있다." 1980년 이전에, 정치학자들 사이에는 제도가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하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최근 제도주의는 비교정치학의 주요한 하위 분야로 컴백하였다. 셋째, "합법성이 없는 국가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없다." 일찍이 헌팅턴은 국가는 합

10) 이 용어는 문승익 교수에게서 유래함. 문승익 1974, 111-118; 정운재 1999, 3-38 참조.

법성의 토대가 없이도 통치하고 국가성의 특질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Huntington 1968), 훌륭한 통치와 민주주의는 쉽사리 분리할 수 없다. 또 개발수준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아니지만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줄어든다(Przeworski 외 1996, 39-55)고 했지만, 민주적 국가건설을 위한 정치엘리트들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강한 국가는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탁월한 성공이 일본의 문화덕분이 아니라 공식적인 산업정책 덕분이었다는 주장 (Johnson, 1982)이 있었지만, 제도의 개발과 발전은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후 일본과 한국, 대만이 보여준 경제 기획 기관의 우수성은 기술관료의 매뉴얼에서 불쑥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고급 관료주의라는 각 나라 특유의 오랜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개발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과 제도들을 운영하는 엘리트의 태도와 성향, 즉 그들이 지닌 문화적 특질이 제도와 정책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Fukuyama 2005, 48-49).

후쿠야마 교수는 오늘날 많은 “실패한 국가”(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와 “약한국가”(외환위기를 맞았던 한국과 태국의 경우)들이 “크고 강한 국가”보다는 “작고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를 줄이는 한편, 선택된 정책부분에서 발휘하는 법적, 행정적 능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V. 결론: 한국정치학의 새로운 연구주제들

반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과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국가경영의 시각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의 증대 등은 한국정치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연구프로젝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우리의 정치적 생활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함”(김홍우, 1999, 717)으로서의 꼼꼼한 관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학적 모델과 이론의 개발에 보다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구미의 이론과 개념들로 소외되거나 왜곡된 한국정치현실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작

업은 식민사관과 문화중심적 연구에 의해 '죽어있는' 조선시대 및 그 이전의 정치사 연구에로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한국정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정치사상은 한국적 전통과 경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분석을 통하여 이해되고 정리될 때에 비로소 한국인과 한국정치를 이끄는 사상과 철학이 될 수 있"(이홍구 1996, 468)다는 역사의식에 따른 실천적 지혜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둘째,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전통(傳統)중심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되었던 구한말기나 해방전후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구미 선진국들의 사상과 문화의 '수용'(受容)이 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전통 혹은 역사적 지속의 측면에서 주요 전환기의 정치사회적 운동들과 사상적 흐름들을 재발견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의 근대화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상적인 근대화 혹은 발전이란 전통과 역사로부터의 단절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그것의 지속과 성숙과정에서의 적응능력의 증대이기 때문이다(정운재, 2005a, 175-202).

셋째, 우리의 정치적 생활세계에 던져진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참하여, 국가경영 차원의 비전, 진단, 그리고 처방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이러한 비전, 진단, 처방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및 상상력의 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면 그것은 곧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 여타 발전 도상국가들에게 중요하고도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포함한 한국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여러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주요 사건과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과 사상들을 이 같은 "문제해결적 접근"(정운재 1999)을 통해 새롭게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금동서의 역사를 통해 등장했던 각종 사상(思想)과 사실(史實)들을 개념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행에서 나아가 국가경영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과 사실들은 사실상 그 주장한 인물과 관련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상사회를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결과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대 서구의 사회과학이 실증주의에 경도되어 사실과 가치를 분리했던 연구경향이 지닌 파행성을 극복하고, 사실과 가치가 서로 교섭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격물(格物)하고 치지(致知)하는, 그럼으로써 경(經)과 사(史)가 다함께 섭렵되고 고려되는 한국정치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 김학준. 1987. 『이동화 평전』. 민음사.
- 김홍우. 1999.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 지성사.
- 문승익. 1974. “자아준거적 정치학: 그 모색을 위한 제안.” 『국제정치논총』 13/14집, 111-118.
- 배성동. 2002.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정치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법문사.
- 문화재청. 2005.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사례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신복룡. 1999. 『한국의 정치사상가: 전기정치학을 위한 시론』. 집문당.
- 안청시. 1987. “한국정치학의 발전과제와 방향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론』. 법문사.
- 이흥구. 1996. 『이흥구문집 II』. 나남출판.
- 정윤재. 1997. “현대 정치학과 정치 리더십.” 박찬욱 외. 『미래한국의 정치적 리더십. 생각의 나무』, 25-59.
- _____. 1999. “‘자아준거적 정치학’과 한국정치사상 연구: 문제해결적 접근의 탐색.” 정윤재 외.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8.
- _____. 2003.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 _____. 2005a. “전통문화, 리더십, 그리고 정치발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 화연구소. 『유교문화연구』 9집, 175-202.
- _____. 2005b. “정치평론, 한국정치학,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한·중·일 개화과정에서 정치평론의 역할』. 한국정치평론학회 2005년 춘계학술심포지움.
- 정종섭. 2002.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일빛.
- 최상용. 2002. “중용탐구-동서양의 만남.” 최상용 외. 『인간과 정치사상: 전통, 갈등, 그리고 비전』. 인간사랑.
- Fukuyama, Francis 저 · 안진환 역. 2005. 『강한 국가의 조건』. 황금가지.
- Berlin, Isaiah. 1996. *Karl Marx: his life and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ige, Glenn D. 1977.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Tocqueville, Alexis de. 1984.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entor.

Tucker, Robert C. 1981. *Politics as Leadership*.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Tsurutani, Taketsugu. 1973. *The Politics of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Leadership in Transitional Societies*. London: Chandler Publishing Co.

Viroli, Maurozio. 1999. *Republicanism*. New York: Hill & Wang.

Welsh, William A. 1978. *Leaders and Elites*.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ABSTRACT

Korean Politics, Statecraft, and Korean Political Science

Yoonjae Chung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paper criticizes modern political science in Korea from a “self-referential approach” and seeks to suggest new research topics for a scientific understanding of Korean political experiences over the decad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n political scientists tend to give more attention to American or Japanese politics for their theoretical critiques of Korean politics rather than making sincere observations of Korean realities. Envisioning the future of new Korean political science in the 21st century, it has been emphasized Korean political scientists has neglected leadership and stateness. Also, some new research orientations were explored in the conclusion: more direct observations of Korean political experiences should be made for model-building and scientific conceptualization; new approaches to modern Korean politics in the light of tradition or historical continuity must be applied; political scientists should be engaged in the problem-solving efforts along with practitioners; a rediscovery or reevaluation of ideas and facts in Korean politics should be made in terms of statecraft or leadership.

Keywords: Korean political science, statecraft, leadership, stateness, self-referential science, sense of reality, republicanism